

새만금 반입 제강슬래그 '폐기물관리법 위반'

윤준병 의원 "즉시 법령 따라 반출, 원상 회복해야"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중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반입된 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즉시 법령에 따라 제강슬래그를 반출해 원상 회복하고, 위반한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반입한 제강슬래그의 재활용환경성 평가 및 폐기물의 재활용기준과 관

련해 환경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전북도는 관련규정 해석 자체 검토 의견으로, 해당 제강슬래그가 '슬래그 가공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9B)의 조항 중 재활용제품(R-4-2)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새만금개발청도 직접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R-4-2)에 해당해 건설공사 등에 직접 이용 가능한 골재이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환경유해성이 없는 것을 도로 보조기중재로 사용한 것이라는 내용의 국정감사 자료를 윤 의원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당



업체의 환경표지 인증제품이 '도로기중용 골재'의 용도로 인증이 부여된 제품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유형별 세부 분류코드(R-Series)와는 무관하게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 제품이 도로기중용 골재로 인증용도가 명시돼 있으므로 제품의 재활용 유형으로 구분해 본다면 R-7-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제2호의 조항에 따라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중재, 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1)의 경우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

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음을 확인했다.

원래 새만금 육상태양광 부지는 방조제를 막으면서 내부 수위 조절로 육지화된 노출부지나 해수면보다 1.5미터 낮은 저지대이자 연약지반 지대이며, 법령상 공유수면에 해당한다.

때문에 윤 의원은 지난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폐기물처리업체 A 대표에게 도지사의 인정여부를 질의했고 A대표는 "인증을 받았다"고 대답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도에 공식 확인한 결과, 별도의 인정하는 조차지 공문을 발송한 바 없음"이라고 회신을 보내왔고, A대표 역시 10여 일이 지나도록 '도지사 인증' 서류를 윤준병 의원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알칼리성 침출수를 유

출시켜 '폐기물관리법' 제13조(2) 제1항 제2호 '침출수나 증기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한 것'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전북지방환경청이 조만간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도 위증을 한 폐기물처리업체 A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윤준병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적 새만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강슬래그의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라며 "제강슬래그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인사 시스템 '난맥상'

'이상한 특별승진 파티'

"자체감사 지적에도 특별 채용·승진 만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들의 승진 임용 등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난맥상이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이 제출한 공사의 3개 자회사에 대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절', '인사 관련 사규정비 필요', '채용절차 위반', '보수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보수 지급 부적절', '일반직 직원의 직능 등급 승급 부적절' 등 인사관리의 보수 지급 위반을 비롯 지적된 문제들이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지난 15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3개 자회사 인사시스템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에게 "2021년 한해 동안 인천국제공항보안주식회사 일반직 5명이 지난 6월 특별승진을 했으나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보안주식회사 사규를 보면 승진대상자는 해당 직급에서 최소 2년간 체류한 직원들

대상으로 하며, 회사의 기반조성과 본인의 업무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경우 2년을 채우지 않아도 특별 승진 임용을 시킬 수 있다고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설립된 지 1년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조기에 승진이 이뤄진 이유가 된다"를 따져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혁혁한 공이 있다면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는데 어떤 공로가 있어 승진이 가능했는지" 물으면서 "설립된 지 2년도 되지 않은 회사라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높고, 이직률도 많이 해서 등등의 사유로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도 승진 과정상의 이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이 같은 일은 비단 보안주식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서도 소위 '조건부 승진임용 우대 채용'으로 인사규정을 어긴 시설관리 주식회사 사장이 인사운영상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자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강화 방안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개 자회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2023 새만금 세계잰버리 개최 예정지를 찾아 준비상황 점검과 국·도비 집행에 만전을 당부했다.

"새만금 인프라 관련 예산 확보 만전 기해달라"

도의회 예결특위, 잰버리 부지 재정사업장 찾아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18일, 2023 새만금 세계잰버리 개최 예정지를 찾아 준비상황 점검과 국·도비 집행에 만전을 당부했다.

예결위원들은 이날 부안군 하서면 일원에 조성중인 잰버리공원을 방문해 먼저 새만금관리청(주) 지면시설 구축내용과 부지매입 진행상황 등 꼼꼼하게 현장점검했다.

이어, 김경필 잰버리지원단장으로부터 잰버리 전반 추진상황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콘서트 개발 및 스카우트 주변확대와 비대면·온라인 잰버리 홍보활동 강화 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후속 활동계획까지 들어봤다.

김경수 예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세계잰버리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

하고, "2022년 본예산에 폭염과 감염병 예방에 대응한 꼼꼼한 예산편성 당부와 2023 세계잰버리를 전북발전의 지렛대로 삼는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지난 9월 추경심사시 세계잰버리 기반시설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이 기재부의 '2020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에 분류된 것을 지적하면서, 신속한 절차 이행 등 성공적인 개최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1% 전북, 잃어버린 성장동력 찾아야"

김수홍 의원, 한은 전북본부 국감서 "경제력지수 최하위 수준"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국회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부위원회)이 1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지방현장 국정감사에서 "전북도의 낙후된 현실을 지적하며, 잃어버린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의 수출과 수입량이 전국 총량 대비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라며 "왜 하위 1퍼센트 전북이 됐을까 참담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접 광역자치체인 충남도와 비교해보면 수출은 15배, 수입은 5배 차이가 난다"며 "이런 격차가 벌어진 것은 산업구조가 불균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홍 의원에 따르면 제조업 비중이 적은 데다 서비스업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전북의 산업구조가 낙

후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일자리 감소 및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전북본부별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경제력지수는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인력기반, 소득수준, SOC 및 재정력 산업발전 분야에서 모두 평균(6.0)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수홍 의원은 "산업구조 전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산업 발굴, 내부역량 강화 및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라며 "한은 지역본부나 지방경제청 등 공공기관이 당장 할 수 있는 균형발전 사업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김수홍 의원은 "잃어버린 세월의 고착화된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며 "하위 1% 전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에 따르면 제조업 비중이 적은 데다 서비스업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전북의 산업구조가 낙

/유호상 기자



카카오T 독과점 여파... "공공택시업 도입 시급"

조동웅 도의원, 전북개인택시조합 간담회서 애로사항 청취

"배달공공앱도 유사한 케이스... 유지관리예산 투입 중요"

전북도의회 조동웅 의원(군산시)이 전라북도 공공택시업 도입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도내 14개 시·군 전북개인택시조합 조합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참석해 도내 택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택시업계는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의 독과점으로 콜 물이 부족해, 가맹비 인상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가운데, 택시종사자들의 피해가 가중돼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전국 택시기사 10명 중 9명이 카카오T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독과점이 심각한 상태다. 전북도의회 입장에서라도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는 도내 택시업계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본다"면서 "이제는 택시종사자 택시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공의 적극



적 개입과 문제해결을 위한 공론화가 시급한 단계"고 밝혔다.

이에 택시업계는 "광역차원의 공공택시업 도입이 가장 최선의 해답이 될 수 있다"며 "하루속히 전복도가 나서서 공공택시업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몇몇 지자체들은 이미 공공택시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수원시는 수원택시를 개발,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며, 익산시도 익산공공형 택시 호출 어플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상태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택시 호출 플랫폼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들 대부분 호출비와 가입비가 무료이며, 적립포인트제, 지역화폐

연동 할인 등 공공의 재원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성공여부다. 대규모 자본을 이용해 최상의 기술력과 마케팅이 투입된 대기업 플랫폼과 비교해서 공공의 한정적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택시업이 과연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의 여부다.

조 의원은 "군산시의 배달공공앱인 배달의 명수 역시 유사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며 "공공택시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공적인 공공택시업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편리한 공공앱 개발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운영, 즉 유지관리예산의 투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현재의 막대한 카카오T 점유율을 잠식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홍보마케팅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 이는 단일 시·군차원에서는 어렵고,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규모를 키워야만 가능하다"면서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차원의 지역브랜드 공공택시업 도입이 시급한 이유"고 덧붙이며, 전북도를 상대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재 양성 위한 과제는?

도의회, 정책세미나 개최

전북도의회 인재 양성 및 다문화 연구회(대표의원 황의탁, 연구책임 황성임)가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의 축사와 황성임 책임연구원의 인사말에 이어,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는 전주대 서재복 교수가 지정토론으로는 '도 자치행정과 인재 평생교육' 김수현 팀장, 도 교육청 미래인재과 한현수 과장, 전북연구원 최윤규 연구위원, 익산시청소년문화의회 정성길 관장이 나섰다.

서재복 교수는 발제를 통해 4차산업 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인재 양성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 후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전북도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재에 대한 재정의와 변화된 인재상에 따른 지원정책의 재설계 등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 도 인재평생교육팀 김수현 팀장이 '도내 인재교육 추진체계 간 더욱 강화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인재 양성 정책의 선순환구조' 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도 교육청 미래인재과 한현수 과장은 'NS 기반 교육 등 산업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과 취업역량 강화사업'을 전북연구원 최윤규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인재 양성의 변화와 추후 대응 과제'를, 익산시청소년문화의회 정성길 관장은 '청소년 활동 중심의 인재양성 정책 개발'에 대해 차례대로 토론했다. /유호상 기자

만경·동진강 수계

수질 통합 보전·관리

최영규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이 제38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만경강·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이 지난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만경강과 동진강은 생물다양성이 높고 자연경관도 뛰어나지만,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이 공존하고 있는 곳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곳이지만, 각종 공사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의 수질 및 생태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만경강·동진강 수계의 보전·관리 원칙, ▲관리계획 수립, ▲수질 및 생태계 변화 조사, ▲보전·관리협의회 설치·운영, ▲민간 환경단체 육성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관리종사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근무공간과 휴게·편의시설 등의 설치 지원,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한 신체의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5일 본회의를 통과, 올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